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80조 돌파 국세수입 감소, 재정 안정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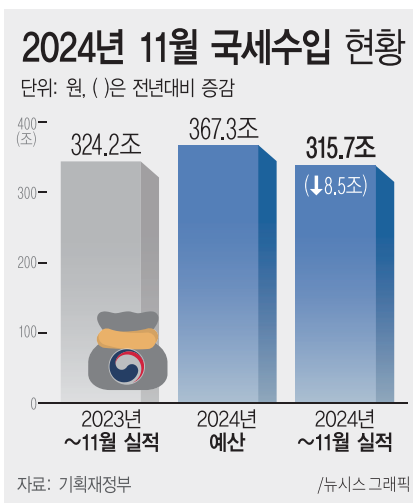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법인세 감소 직격탄, 세수 부족 심화 재정수지 악화, 전년비 적자 16조 ↑ 국고채 발행량 연간 한도 99.5% 달성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11월까지 누적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적자 폭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세(稅)수입 중 법인세가 전년 대비 17조 원 넘게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였다.

항목별로, 세외수입은 26조1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도 20조 원 늘어난 200조 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수입의 경우 국민연금 해외 주식투자 수익이 전년 대비 늘었다"며 "11월에 수입이 3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수입은 8조5000억 원 줄어



든 31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득세가 1조4000억 원, 부가세가 7조3000억 원 늘었지만 2023년 저조했던 기업 실적이 지난해 반영되면서 법인세가 17조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70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1조5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지출이 10조8000억 원 늘어난 386조4000억 원, 기금지출은 11조2000억 원 증가한 18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용처별로 보면 국민연금급여지급이 4조1000억 원, 국고채이자상환은 3조 원, 퇴직급여는 1조8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3조1000원 흑자)를 빼 실질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동기보다 16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98조3000억 원), 2022년(98조 원) 이후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작년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000억 원, 전년동월 대비 +67조원으로 115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전망(1163조 원)에 근접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있어 (채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채무는) 전망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 원)를 포함하면 연간 총 발행 한도는 100%로 올라간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제3국 민간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원칙' MOU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양국은 이 MOU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제3국으로의 민간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경우,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이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고 9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MOU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한 최종 확정을 담았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제 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다.

체결 직후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한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파키스탄 '2.5억' 시장 관세 장벽 허문다

산업부,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한국과 파키스탄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인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에서 잠 카말 칸 파키스탄 상무장관과 한-파키스탄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의 공동변역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 협정이다.

인구 세계 5위의 파키스탄은 풍부한 노동력(인구 2억5000만, 청년비중 30%)과 천연자원(석탄·천연가스·구리)을 보유한 남아시아 대표 잠재시장이다.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경제

권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한-파키스탄 EP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는 우리 측의 수출잠재시장 확보, 파키스탄 측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여 등 양측 모두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정보기술(IT),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해당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올해도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통상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

### KS 166종 국제표준 일치화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을 국제표준과 일치화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정부가 국내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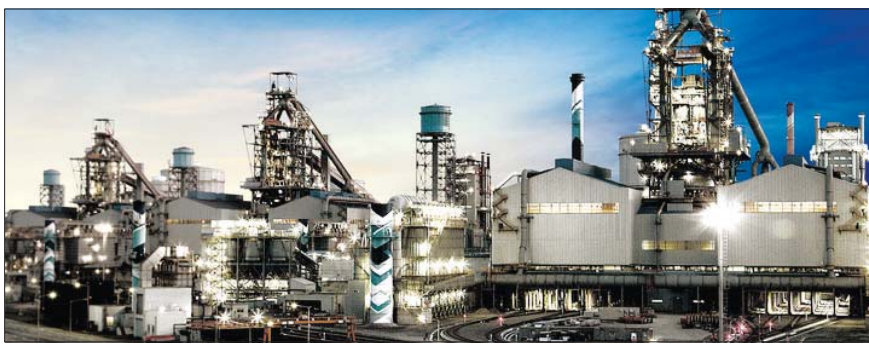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6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표준(KS)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준을 일컫는다. 국제표준(ISO)은 국가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지난해 국제표준에 부합한 국가표준 166종에는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소재의 추적성 관리 방법 ▲제품시스템에서 제품 내 함유 우려 화학물질 관리 ▲수질 중 냄새물질 시험분석 방법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등 다양한 환경분야의 국가표준이 포함된다.

물환경 분야 54종과 토양 분야 18종, 대기환경 분야 8종, 대기배출원 분야 7종, 실내공기질 분야 14종, 지하수 분야 4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5종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뉴시스

## 철강산업 경쟁력, 민관 공동 논의

산업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공급과잉·탄소중립 대응 등 논의 탈탄소 전환 위한 핵심 과제 도출

국내 철강업계의 국내외 현안 대응을 위해 정부가 업계·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다. 철강업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중국발 국제 공급과잉, 탈탄소 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학연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단계적으로 통상 현안에 민관이 협업에 대응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

TF는 산하에 ▲경쟁력 강화 ▲저탄소 철강 ▲통상 현안 등 3개 분과위를 설치했다. 출범식에서 각 분과는 철강산업 발전방안, 저탄소 철강이행을 위한 핵심과제, 철강 통상환경 변화와 과

제 등을 논의했다.

이러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전환 요구로 철강산업이 새 도전과제를 떠안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친환경·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전환 노력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전향적인 투자 노력을 요청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동준 교수는 "철강산업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중립,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새로운 콘드라티에프 파동을 넘기 위해 과거 연관산업과 함께 성장해왔듯이 미래 연관산업과 손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025년은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TF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KREI, 농정·농업 혁신 미래 논의

'농업전망 2025' 대회 16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오는 1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한국 농업·농촌, 변화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농업전망 2025' 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한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농업전망 2025 대회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2025년 농정 이슈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 등을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를 주제로 연세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이 'AI시대 문명사대 전환: 농업혁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기

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김용렬 KREI 농업관측센터장이 '2025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김상호 KREI 동향분석실장이 '2025년 농정이슈'를 발표한다.

2부는 '2025년 농정이슈'를 주제로 ▲시장대응 강화 ▲농업구조전환 ▲농촌과 삶의 3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3부는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에 대해 ▲국내곡물 ▲국제곡물 ▲축산 ▲과일과채 ▲채소의 5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두봉 KREI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다"며 "농업전망 2025가 농업·농촌의 밝은 내일을 위한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